주요 내용

▌네트워크 산업 분할 민영화의 효과 ▐

□ **네트워크 산업과 분할 민영화의 효과**

- **(네트워크 산업의 개념)** 통신, 전력, 가스 등 국가 경제의 기반이 되는 서비스를 전국적인 網을 통해 공급하는 산업으로, 전국적 표준화와 대규모 시설이 필요하고, 공급 서비스의 공공재 성격으로 공기업 독점의 형태로 운영되어 옴
- **(긍정적 효과)** 해당 산업의 경쟁력 확보, 물가 안정 및 기업 생산비용 인하, 외자 유치 확대 및 금융시장 활성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
- **(부정적 효과)** 단기적인 가격 상승으로 인한 가계 및 기업 부담 증가, 노사 관계의 악화, 국부의 해외 유출 등이 우려됨

□ **분할 민영화 계획과 문제점**

- **(정부 계획)** 전력산업의 발전부문을 6개, 가스산업의 도입·도매 부문을 3개 자회사로 분리하여 2002년까지 구조개편을 완료하는 방안을 11월중에 확정함
- **(문제점)** 이는 경쟁체제 도입 후 민영화를 실시하는 단계적 수평적-수직적 구조 개편 방식인데, 조기 민영화를 통한 효율성 확보가 지연될 가능성이 큼

□ **네트워크 산업 구조 개편의 과제**

- **(구조조정 방식의 산업별 탄력적 적용)** 전력산업은 발전부문의 경쟁체제 도입과 동시에 민영화 조기 실시, 가스산업은 지역별 독점 상태인 소매부문에 경쟁체제를 앞당겨 그 효과가 도매부문 민영화를 유도할 수 있도록 해야 함
- **(가격 부담 최소화)** 가격을 통한 국민경제 부담의 최소화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한시적으로 가격규제기구를 설치하되, 각 산업별 특성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도록 거래소 형태(예: 전력거래소, 가스거래소)로 운영할 필요가 있음

현안 분석

네트워크 산업 분할 민영화의 효과

곽 용 선

논의의 배경

- **네트워크 산업의 분할 민영화 방안 확정에 따라 최근 그 효과에 대한 찬반 논쟁이 가열되고 있음**
  - 정부는 1998년에 마련된 공기업 민영화 계획에 의거하여, 네트워크 산업중 전력산업과 가스산업의 구조조정 방안을 11월 중에 확정한 뒤, 기업별로 2000~2002년에 걸쳐 민영화를 완료할 예정임
  - 그러나 이들 산업의 분할 민영화에 따른 기대 효과의 실효성을 두고 찬반 논쟁이 가열되고 있어, 애초 일정의 구조조정이 다소 지연되고 있는 상황임

- **네트워크 산업의 개념과 민영화의 의의**
  - 네트워크 산업이란 통신, 전력, 수도, 가스, 도로 및 철도 등 국가 경제의 기반이 되는 각종 서비스를 전국적인 網을 통해 공급하는 산업을 뜻함
  - 네트워크 산업은 그 특성상 전국적으로 표준화되고 대규모인 시설이 전제되어야 하고, 또한 공급되는 서비스가 공공재의 성격이 강해 이제까지는 공기업 독점의 형태로 운영되어 왔음
  - 그러나 외환 위기 극복 과정에서 공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네트워크 산업의 민영화 계획이 추진중에 있으며, 이러한 네트워크 산업의 민영화는 선진 각국에서 이미 성공적으로 수행된 바 있음

- **네트워크 산업의 구조 개편 방식**
  - **(경쟁체제와 민영화 도입 순서)** 분할 민영화를 하되 단계적으로 경쟁체제를 형성한 뒤 매각하는 방식(선 경쟁-후 민영화)과 그 반대 방식(선 민영화-후 경쟁), 경쟁체제 도입 및 민영화를 동시에 추진하는 방식(경쟁-민영화 동시 실시)이있음
  - **(수평적·수직적 분할 여부)** 전국적인 망을 통해 서비스를 생산, 유통, 판매한다는 네트워크 산업의 특성을 이용하는 것으로, 네트워크를 지역별로 분할하는 방식(수평적 분할)과, 생산-유통-판매 등 부문별로 분할하는 방식(수직적 분할)이있음

< 네트워크 산업의 구조 개편 방식 >

구 분		내 용
경쟁체제와 민영화 도입 순서	선 경쟁-후 민영화	분할을 통해 경쟁체제를 먼저 도입한 뒤 민영화
	선 민영화-후 경쟁	분할 민영화하되 지역별로 일정 기간 독점체제
	경쟁-민영화 동시	경쟁체제 도입과 민영화를 동시에 실시
분할 영역 기준	수평적 분할	네트워크를 지역별로로 분할
	수직적 분할	생산-유통-판매 등 부문별로 분할

산업별 분할 민영화 현황 및 계획

- **통신산업**
  - 1980년대 후반부터 독자적인 구조 개편 작업을 실시하여 왔으며, 현재 경쟁체제가 정착되고 있는 단계임
  - 국제전화, 시외전화에 이어 시내전화 사업에 경쟁체제가 도입중인데, 이들 부문의 경쟁은 '선발 공기업, 후발 민간기업'의 형태인 반면, 이동통신(PCS), 인터넷 사업 등의 부문은 공기업과 민간기업이 동시에 경쟁하는 형태임

- **전력산업**
  - 1단계로 2000년에 발전 부문을 지역별로 6개(1개는 원자력 부문)로 분할하고, 2단계로 배전 부문에 경쟁체제를 도입하여 2002년까지 민영화함
  - 이에 따라 총자산 61조 원중 34조 원, 총부채 32조 원중 17조 원, 총인원 3만 5,000명중 1만 6,000명이 자회사로 이관됨

- **가스산업**
  - 2001년에 도입 및 도매 부문을 3개 자회사로 분할하고, 그중 2개사를 2002년에 민영화하는 구조 개편안을 확정함
  - 장기적으로는 현재 지역별 독점체제인 소매부문에 경쟁체제를 도입함

< 네트워크 산업별 구조조정 현황 및 계획 >

구 분	주 요 내 용	방 식
통신산업	- 1980년대 후반부터 현재까지 진행중 - 국제, 시외, 시내, 이동전화 경쟁체제 도입	각 사업부문별 경쟁체제 동시 도입 형태
전력산업	- 2000년 발전부문 6개 자회사 분할 - 2002년 배전부문 민영화	경쟁-민영화, 수평적-수직적 구조 개편의 단계적 추진 형태
가스산업	- 2001년 도입 및 도매부문 3개 자회사 분할 - 장기적으로 소매부문 경쟁체제 도입	

분할 민영화의 효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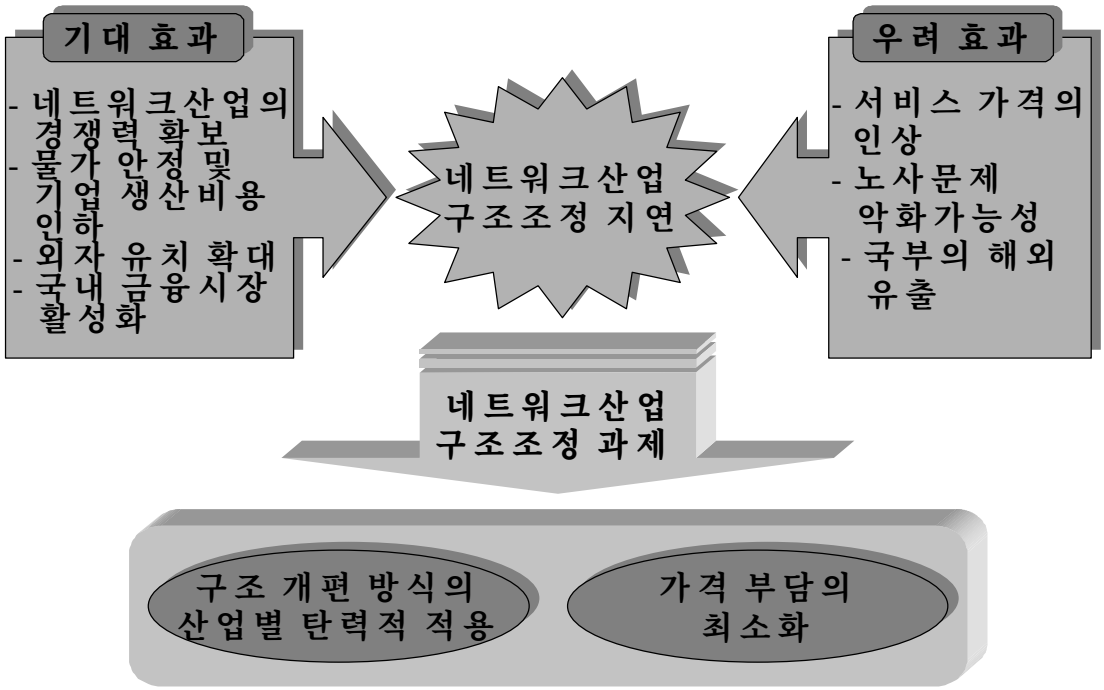
- **분할 민영화에 따른 기대 효과**
  - **(네트워크 산업의 경쟁력 확보)** 국내 전력 및 가스시장 규모는 급성장하고 있으나, 진입·가격·운영 규제가 작용하는 공기업 독점 형태로는 경쟁력있는 경영을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려움
  - **(국민 경제적 기여)** 분할 민영화를 통한 경쟁체제 도입은 장기적으로 서비스 가격의 하락을 가져와, 물가 안정 및 기업 생산비용 인하의 효과가 기대됨
  - **(외자 유치 확대 및 금융시장 활성화)** 수익성 높은 기업을 자산 매각 방식이 아닌 일반 공모 방식으로 분할 민영화하므로 외국 자본의 국내 유치가 보다 활발해지고, 증권시장을 비롯한 국내 금융시장이 활성화될 것임

- **분할 민영화에 대한 반대 견해**
  - **(국민 경제적 부담 증가)** 분할 민영화는 도입 창구의 분산으로 원료 가격을 상승시키는 동시에, 공공요금 규제에 따라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던 서비스 가격의 인상이 예상되어 국민 경제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것임
  - **(노사 문제 악화 가능성)** 고용 승계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분할 민영화가 이루어질 경우 불안한 공기업 노사관계가 더욱 악화될 것임
  - **(국부의 해외 유출)** 네트워크 산업이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감안할 때, 분할 민영화는 국가 자산 및 기간 시설 정보의 해외 유출을 가져옴

네트워크 산업 구조조정의 과제

- **(구조 개편 방식의 산업별 탄력적 적용) 각 산업별로 구조 개편 방식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되, '경쟁-민영화' 혹은 '수평적-수직적 구조 개편'을 동시에 추진하는 방안을 고려하여야 함**
  - 현재 전력산업과 가스산업의 구조 개편 방안은 선 경쟁체제 도입-후 민영화 방식, 혹은 단계적인 수직적 구조 개편 추진의 형태를 보이고 있으나, 일률적인 구조조정 방식의 적용보다는 탄력적인 적용 방안이 필요함

< 네트워크 산업 구조조정의 현안과 과제 >



· 전력산업의 경우, 각 부문별 경쟁체제의 동시 도입이 큰 효과를 가지고 온 통신산업의 경우처럼 발전부문의 경쟁체제 도입과 동시에 민영화를 조기에 실시하여 수평적·수직적 동시 구조 개편의 장점을 살필 필요가 있음
· 가스산업의 경우, 이미 지역별 독점이 이루어진 소매부문의 경쟁체제 도입을 앞당겨 그 효과가 도매부문의 민영화를 유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

- **(가격 부담 최소화) 네트워크 산업 구조 개편에 관한 찬반 논란의 공통 근거가 되고 있는 가격을 통한 국민경제 부담의 최소화가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함**
· 선진국의 예에서 나타났듯이 경쟁의 효과가 본격화되기 이전에는 단기적으로 서비스 공급 가격이 인상이 불가피하여 소비자 및 기업 비용 부담 증가, 물가 상승에 대한 압력으로 작용할 것임
· 따라서 한시적으로 가격규제기구를 설치하되, 각 산업별 특성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도록 거래소 형태(예: 전력거래소, 가스거래소)로 운영할 필요가 있음

(yskwak@hri.co.kr ☎ 724-4058)